

教育空間의 質 向上을 위한 試論

— 교육시설의 문제와 교육개혁 그리고 교육공간에 대한 논의의 허와 실 —

Upgrading the Space Quality of Educational Facilities.

安 昌 模*

I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교육개혁방안의 초점은 한국교육의 현안을 ‘양적 성장 중심의 교육’, ‘입시제도문제’, ‘획일적 규제위주의 교육 행정’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교육체제’의 구현을 목표로 ‘열린교육사회와 평생 학습사회’의 건설을 설정하고 있다. 열린교육사회의 실현은 교육시기의 열림, 교육장소의 열림, 교육기관과의 열림, 대학교육의 열림, 중등 교육의 열림, 누구에게나 열린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교육체제는 ‘학습자 중심교육’, 교육의 다양화, 자율과 책임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교육의 정보화, 질 높은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교육개혁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1.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2.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3. 초 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4.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5.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학제도 6.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 중등교육 운영 7. 교육 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계 구축, 8. 품위 있고 유능한 교원육성, 9. 교육재정 GNP 5% 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발표하였는데, 구체적인 방안이나 일정에서 교육시설과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보이지 않는다. 교육관련시설이 어떠한 위치에서 교육 개혁을 지원할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향후 교육개혁의 성공적 실천을 위해서 교육시설이 담당해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교육시설에 관한 논의의 허와 실

현재의 교육시설 관련 논의(최근의 교육개혁 위원회의 발표내용을 포함해서)를 유심히 살펴보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고, 그나마 하드웨어에서도 질보다는 양에 치우쳐온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제여건과 교육정책 및 제도하에서는 양적 충족이 문제해결이 관건이었지만, 장래의 교육을 위해 교육개혁을 논하는 시점에서는 교육의 양보다는 교육의 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데에 범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교육의 질은 총체적으로 평가되고 개선되어져야 할 부분으로 제도의 변경이나 물리적인 시설의 양의 확보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교육시설의 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교육기자재의 질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건축물의 질의 문

* 正會員, 서울大 建築學科 講師

제이다. 그리고 건축물의 질은 공간을 구성케 하는 물리적 실체(바닥, 벽, 천장 등) 자체와 이들로 형성되는 공간의 문제로 구분되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교육시설은 양의 확보가 시설의 질을 담보해준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실은 최소한의 질만을 확보할 수 있을 뿐이다.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무제한의 양을 공급하는데 있지 않다. 교육시설의 질이란 시설의 물리적 질 뿐아니라 비물리적 질 즉 '교육공간의 질'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교육공간의 질이란 교육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공간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통해, 성장기 아동의 공간체험을 통한 교육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교육공간은 지식의 전수, 교환 및 생산의 장이며, 공간특성은 생산되는 지식의 성격을 가늠하게 하는 척도도 되지만 역으로 생산되는 지식의 내용을 규정하는 역할도 가진다. 이러한 건축의 역할 때문에 전통적으로 통치자들은 건축을 지배이데올로기를 이식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왔는데, 이는 단지 건축의 외관뿐 아니라 공간구성에서도 확인히 드러나는 사실이다.

학교시설의 문제점을 논할 때 기본적으로 보통교실의 부족, 과대 규모 학교, 특별교실의 부족 등 양의 문제를 논할 뿐, 교육공간의 질을 논하는 것을 본 적은 거의 없다. 지금까지는 질을 논의할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문제의 진단은 어느 정도 해결방안의 방향까지를 규정하게 되는데, 교육시설의 문제를 이와 같이 물리적인 양의 문제로 축소할 경우, 교육시설의 문제를 경제논리로 귀결시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때 시설기준을 높여 양을 확보하면 교육시설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양의 문제를 해결한 뒤에는 항상 뒤따르는 문제가 질의 문제이다. 학교시설의 질 향상이 목구조에서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골구조 등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된다. 시설 면적의 증가가 질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공간

의 질이란 이와는 무관한 것이다.

학교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모범답안으로 제시하는 '현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한편 미래에 대비 전략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기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는 처방은 대표적으로 양의 확보가 질을 보장한다는 사고를 대변한다.

II

학교는 대표적인 지식생산의 장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생산해내는 또는 생산해내야 하는 지식의 종류에 따라 공간조직은 점진적이기는 하나 변화를 거쳐왔으며,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국가의 정체성과 교육정책에 영향받은 바 크다. 이러한 지식생산의 공간인 학교건축을 설계하는데 있어 건축가의 창의적인 노력이 공간구성과 외부형태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논리가 지향하고 있는 바에 대한 공통의 공감대는 형성되어있다.

해방이후 우리의 학교건축의 대표적인 유형을 통해 학교건축의 교육공간 형성의 뿌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의 교육공간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날 학교건축의 시작은 구한국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구한말의 학교는 설립 주체에 따라 2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관 주도의 관공립학교와 민간인 주도의 사립학교가 그것이다.

우리에게 학교건축이 도입된 근대 초기에는 대부분의 학교건축들이 전통가옥 또는 교회를 빌어 쓰는 형식이었으나, 시간의 경과와 함께 선교사가 중심이 된 학교는 급속히 양식풍의 건축의관이 우세해졌으나 관 주도의 학교건축의 경우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 한옥을 교육시설로 전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08년 개설한 관립 한성외국어학교다.

- | | | |
|------------|----------|--------|
| 1. 教官室 | 7. 法語部教室 | 13. 庫圓 |
| 2. 事務室 | 8. 德語部教室 | 14. 翼廊 |
| 3. 日語部教室 | 9. 前間 | 15. 便所 |
| 4. 日語速成科教室 | 10. 後門 | |
| 5. 英語部教室 | 11. 便喚室 | |
| 6. 漢語部教室 | 12. 圖書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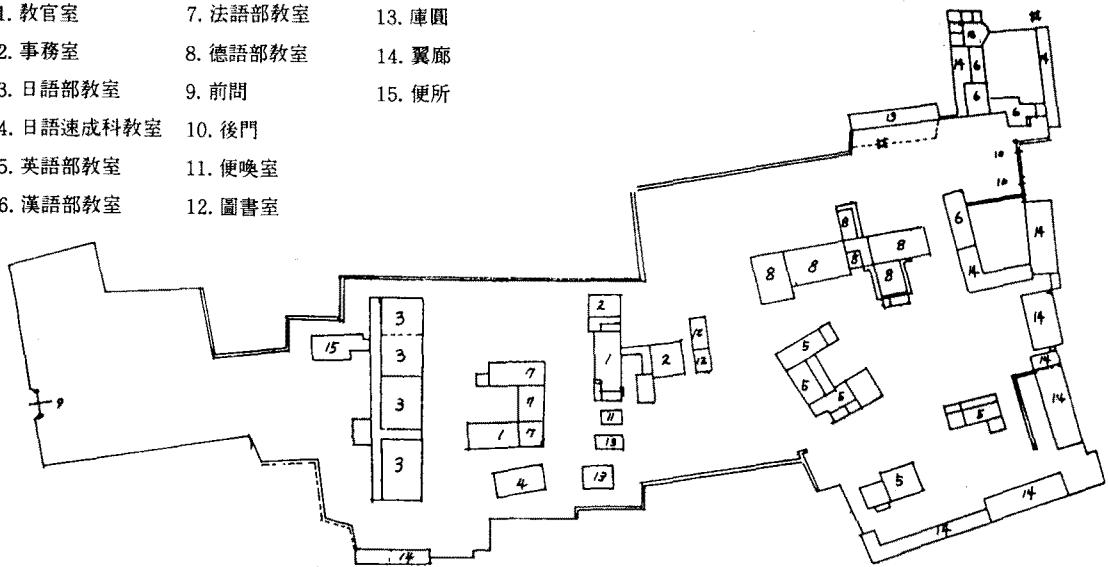


그림 1 관립 한성외국어학교 배치도

이 학교는 구 관립의학과 은언군의 저택을 매입, 수리하여 개교한 외국어학교로 교사는 모두 한옥이었다.

공간배치는 전통적인 한옥의 공간구성을 따르고 있으나, 행랑채, 사랑채, 안채로 구성되는 공간의 성격과 위계적 구성이 상실되고, 특정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동등한 격으로 그룹 지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전통건축 공간이 새로운 문물의 수용시 사용자가 목적에 따라 어떻게 공간해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건축의 원형적 형태가 발생한 것은 일제시기이다. 이 시기의 학교건축은 일본류의 준 양식 건물이 주류를 이루었고, 그 배치 및 학교시설 기준도 일본 본토의 학교에 준하였으며, 단지 미션체 학교와 일부 사립학교 송설, 배재, 이화, 중앙, 연희 등의 학교에서 서구양식에 비교적 충실히 건축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사배치는 一자형, 二자형, 가자형 등으로 배치하여 편복도 형식을 취하는데, 교지의 한

쪽으로 교사를 몰아서 가늘고 길다란 교사군을 북쪽에 앉히고, 남쪽에는 교사군을 배경으로 하는 운동장이 배치된다. 이 운동장은 원래 계획되었던 것은 아니고 초기에는 여지의 활용이라 단순히 유희장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학제의 공표에 따라 근대교육으로 넘어오면서 휴식의 필요성에 의하여 빈터를 비워두는 소극적인 계획에서 벗어나 교사군과 운동장으로 분리하여 운동장에는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식목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계획으로 전환되고, 이는 일제 군국주의화의 급속한 진행과 함께 조희, 군사훈련의 장으로 활용된다.

교실공간의 기준도 1885년의 일본의 소학교령에서 한 학급당 최대 학생 수를 기준으로 규정한 '아동 수 80인 이하는 1인의 교원이 수용할 수 있다.'라는 기준에 근거하고 있으며, 1891년에는 설비준칙을 마련하여 '아동 4인마다 1평보다 적지 않을 것'을 또 '각 교실은 한 사람의 교원이 동시에 교수할 수 있는 인원의 아동이상을 수용할 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시에 준해 마련된 80명/4명 = 20평(4칸×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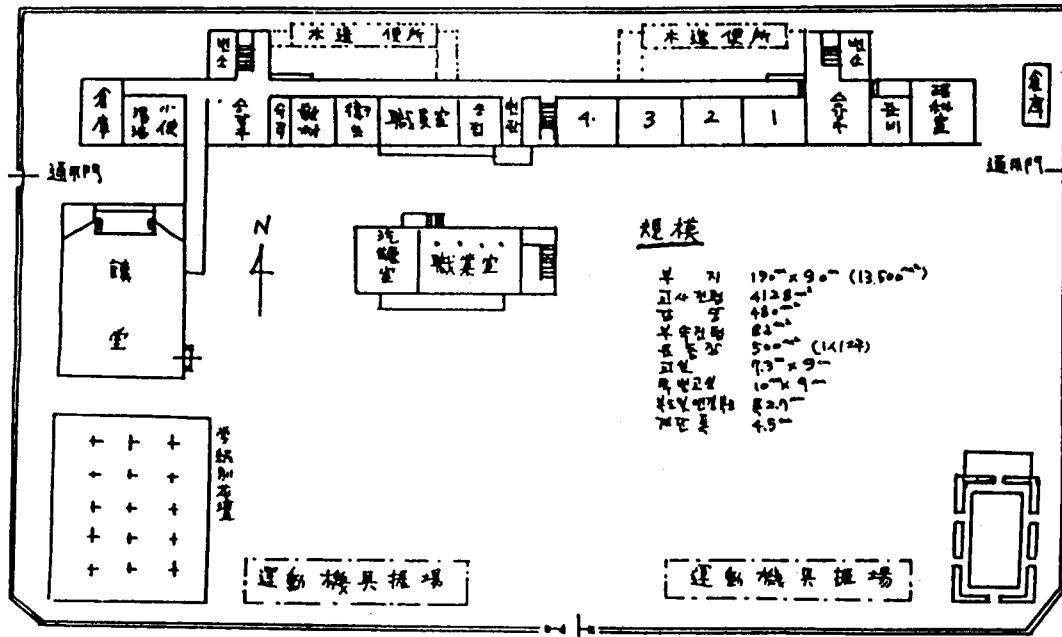


그림 2 소학교 철근콘크리트조 표준배치도

칸; 66M²) 이라는 교실의 최대크기가(최소기준이 아님)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의 기준에 준해서 조선에서도 소학교 교실의 크기가 4칸×5칸(66M²)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기준은 최근까지도 유효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방후 학교건축의 양식이나 구조의 변화는 일어나지만 교사배치의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는다. 특히 한국전쟁을 통하여 파괴된 교육시설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교육원조자들은 대부분 교실복구에 사용되었으며, 미국의 원조물자에 의한 목조구조가 다양 지어지게 되나 교사배치의 틀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

1954년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 수립된 이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시설의 공급은 표준설계도의 개발로 이어지며 1972년에 제정되어 75년과 80년에 걸쳐 개선이 이루어지지만, 교사계획과 배치계획에 있어 특별한 연구성과가 반영되었다기 보다는 건축재료와 외관 및 시공상의 개선 등 물리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근본적으로 교육공간상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없다.

표준설계도란 최소의 경비와 시간으로 최대 양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성립한다.

따라서, 표준설계도는 기본적으로 교육기본법의 정신인 “모든 국민은 그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정신에 입각한 입학의 기회균등, 학습의 기회균등이 보장되도록 양적 확보가 중요한 시기에 소정의 역할을 다하였다.

한국의 의무교육은 기획의 균등 뿐아니라 학교의 물리적 질의 평준화, 교육공간의 획일적 평준화도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하게 만들었다.

1987년 제5차 국민학교 교과과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기초교육의 강화, 종합교육과정의 구성과 미래사회 대응교육 강화 및 종합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1,2학년과 3,4,5,6학년의 교과과정을 분리하였으며, 1,2학년에서는 새로운 교과개념에 의한 통합교과 실시함으로써, 몇몇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열린교육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금년에 교육개혁이 단행되어

이의 전면적인 실시가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 가능하게 되었다.

표 1. 학교급별 취학률(단위: %)

연도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
1966	1.1(1.0)	98.1(96.9)	41.4(31.3)	26.4(18.7)	-
1975	1.7(1.6)	105.0(105.3)	71.6(63.1)	40.8(32.5)	9.5(5.4)
1985	18.9(18.5)	100.4(101.1)	100.0(99.6)	79.5(75.5)	35.6(21.6)
1993	35.9(36.2)	101.4(101.9)	96.3(96.5)	90.0(89.1)	44.8(30.3)

주: ()안은 여학생 비율 / 자료: 한국교육지표, KEDI(1993)

표 1에 따르면, 1945년 적령 아동(6~12세)의 1/3인 136만이 국민학교에 입학하였으나 70년대 들어 100% 취학이 가능해지고, 중학교의 경우 1985년 들어 100%가 되는 시점에서 교육의 질적 성장에 눈을 돌려 열린교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교육이 그 동안 양적 성장 일변도로 추구한 성과가 일단락된 이후 질적인 확대에 치중한 교육제도를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년 전에 개교한 불암국민학교는 학교시설 현대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현대화 시범학교에는 예쁜 현대식 건물에다 실내체육관, 시청각실, 컴퓨터실, 교사연구실, 회의실, 휴게실 등이 모두 마련되어 있다.

외부공간의 구성에서 대운동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고 교사의 배치를 통해 학생위주의 외부공간을 구성한 것 등은 돋보이는 부분이다.

그러나 교설구조는 사면이 가로막힌 전통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새로운 교육방법과 각종 시청각 기자재의 활용을 전제로 해서 교실의 구조를 계획하고 비품을 만들어 놓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어떠할까? 교실수업을 직접 참관하지는 못하였지만 교실의 구조와 학급당 학생 수를 근거로 추정하는 것이 과히 어렵지 않다. 작년 경우 학급당 학생 수는 57명 수준이었다. 저학년의 경우는 66명으로 현대화 시범학교의 학

급당 학생 수가 일반 학교의 그것보다 10여명이나 많다. 그렇다고 해서 교사들이 팀을 이루어 학생들을 지도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²⁾라는 어느 신문기사의 시평은 현대화 시범학교가 갖고 있는 현재적 한계점을 잘 보여준다.

우리의 현대화 시범학교는 물리적인 하드웨어의 현대화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을지 몰라도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으며, 현대화 시범학교에서는 새로운 교육공간에 대한 시범도 보여주었어야 했다.

우리의 교육공간은 한일합방과 함께 전통공간의 재해석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면서, 일제시대의 구축된 배치의 틀 속에서 70여년간 유지되어왔다. 80년대 들어서면서 시작된 변화도 기본적으로 운동장과 교사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단지 교사배치에 있어 부분적으로 달라지는 면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단위공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 일제시대 1인당 좌석의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설정된 시설기준이 여전히 유효하며, 기존의 일반교실에 특별교실이 부과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신식교육 100여년의 역사에서 가장 변화가 늦은 부분이다. 다행히, 열린교육의 보급과 함께 특별교실+일반교실 경향으로 추구되어지나 평면적인 크기의 변화만 보일 뿐, 다양한 교육공간에 대한 연구나 개발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본질적으로 공간개발이라는 축면에서의 변화는 거의 없다. 현재의 교육공간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부수적으로 얻어진 결과에 불과하다.

III

교육시설에 대한 그 동안의 문제의 핵심은 과밀교실과 과대학교의 문제이다.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1인당 절대면적의 부족에 대한 지적이며, 이는 학교의 증설을 통한 학급당 인원을 조정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여왔다. 그러나 이는 본질적으로 교육공간의 질적 저하를 나타

내는 지표이기는 하나 교육공간의 질을 평가하는 올바른 수단은 되지 못한다.

계량화된 수치들이 행정가들에게는 유익한 자료의 전부일지 몰라도 적어도 물리적인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인들에게는 전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참조사항일 뿐이다. 비계량화된 자료의 축적과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건축인들 역시 쉽게 가시화가 가능한 계량화에 눈을 돌리기 쉬운 것이 현실이다.

대표적인 예로 국민학교 단위공간계획의 결정인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교과서처럼 나열하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 수(최대, 최소)에 의한 적정 인원수 배치/필요가구의 적정 배치계획/채광과 통풍의 적정 영향권 설정/아동의 시력, 청력의 한계성 /교사의 활동 범위 적정치/건축구조의 경제적 스판 등”

이들 인자들은 단위공간계획의 기준이라기보다는 공간의 밀도나 길이 면적 등을 규정하는 기준들로 일제시대 교육시설기준의 현대적 변안에 불과한 2차원의 단위크기에 관한 것들이다. 교실의 크기는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내용과 학생의 활동 범위를 중심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고, 일제식 교육을 전제로 한 학생의 점유좌석 크기에 기준한 것으로 단위 공간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교육이데올로기의 변화가 시설기준의 변화에 반영된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현재의 학교계획에서는 단위공간계획에서 단면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다. 다양한 공간경험이 교육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열린교육을 지향하면서 교육시설에 대한 개념중 가장 발전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배치계획의 변화이다. 외부공간을 적극적으로 교육공간으로 끌어들여는 노력이 그것이다.

그러나, 외부공간에 대한 논의 역시 외부공간의 구성요소를 독립적인 단위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지만, 이는 개별적인 모색에 불과하고 옥외공간이라는 전체를 위한 종합적인 모색에 대한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운동장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의 표피와 옥외공간 내에 존재하는 시

설물의 종류와 질에 대해서는 논하지만 건물과 옥외시설에 의해 규정되는 옥외공간의 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즉, 획일적인 건물의 외관의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는 옥외공간을 위한 배려보다는 건물 자체의 외관을 위한 것으로 한정되고, 운동장의 운동시설, 담 등은 시설자체의 존재가치에만 치중하여 이 모두를 포함하는 옥외공간의 입장에서 논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IV

교육개혁과 정보화사회 그리고 교육공간

교육개혁안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열린교육사회와 평생학습社会의 기반구축인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점은행제의 도입… 중략… 농어촌의 교육장화/여성 및 노인의 재교육 기회 확대/성인 학습자의 다양한 교육 욕구 수용/원격교육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교육에의 접근 통로가 열려져 있어야 한다. 교육의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동원한 새로운 차원의 교육의 지평이 열려져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교육을 받기 위한 행태와 앞으로의 행태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할 것임을 시사해준다. 즉, 교육을 받는다는 행위가 학교라는 물리적인 실체를 통하지 않고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학교에 갈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교육을 받으므로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교육을 받는 시간에도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전통적인 지식생산의 공간인 교육 공간의 해체를 의미한다. 극단적인 비약을 하면 학교라는 조직은 대형 컴퓨터 하나만으로 운영이 가능하게된다. 교육은 집에서 컴퓨터통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실기교육은 컴퓨터가 지정하는 인근 지역의 공공시설과 체육관을 이용하면 된다. 담임선생은 컴퓨터가 되며, 보조교사들이 사람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의 상황에서도 학교라는 교육공간이 필요하겠는가?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생산으로서의 공간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즉, 공간의 성격과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다.

미술관에서 진품 예술품이 갖는 의미가 복제기술의 발달에 의해 교육방법이나 존재의미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미술관이 새로운 공동경험의 장이라는 현대적 의미를 가지고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는 것처럼(물론 공간 구성방법은 많이 달라졌지만), 학교 역시 정보통신 발달에도 불구하고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학교의 존재 목적에 대한 규정은 교육관계자의 뜻일지라도 이를 수용하는 공간의 창출은 철저히 건축가의 역할이다. 교육공간이란 규범적인 지식만을 전달하는 장소가 아니며, 공동체적 경험과 함께는 동시에 개체적 경험을 체험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개체 중심적인 경험이 중시되는 정보통신사회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롭게 바뀐 교육제도는 교육시설 및 공간에 종체적인 변화를 요구할 것은 자명해 보인다. 미래의 교육공간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와 준비는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개혁의 추진일정을 보면 주요 정책사안별 추진일정에서 교육개혁이 추진되는 물리적인 실체인 교육시설: 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누락되어 있다. 일을 시작해야 한다.

V

학교시설이 더 이상 지역사회의 중심이 아닐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정보사회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커뮤니티의 개념과 커뮤니티의 형성방법이 바뀌고 있는 현실에서 전래의 개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학교시설이 커뮤니티 형성의 중심시설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은 미래사회에서 학교가 갖는 위상에 대해 새롭게 재검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이를 대하는 건축가의 의식 또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제는 교육시설이라는 용어 대신 교육공간

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보자. 교육시설이라는 용어는 교육관련 제시설의 물리적인 양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반면, 교육공간이라고 지칭할 경우 물리적인 양보다는 해당시설의 질에 대한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교육공간에 대한 논의가 2차원에 머물러, 교육시설의 문제가 평면적인 크기/면적과 직결된 양의 문제로 한정되는 한계를 극복하여야 한다. 공간은 말 그대로 입체의 문제이며, 볼륨으로 인식되는 경험의 장이다.

건축가는 공간경험을 강화시키고 다양하게 해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다. 물론 나이와 성별 등에 따라 사람들의 공간경험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점이 건축가들을 어렵게 하는 점이다. 건축이 갖는 전문성은 학습공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능력을 소지하고 있는데 있다. 건축가 앞에 놓여진 과제는 관련된 교육과정 및 학생들이 원하는 공간의 기능에 대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연구 개발해내는 일이다.

이와 함께 정보사회 추세, 교육의 지방화 추세, 지역사회에 대응하는 학교모형 등 구체적인 혁안에 대해 건축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건축적인 대안제시에는 건축의 양보다는 질 향상을 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정책적으로 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양”的 문제와 건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교육공간의 질” 문제는 전문가 집단이 논의를 확대해 나갈 필요 있는 부분이다.

교육공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하며, 교육시설관련 법규의 정비 역시 새로운 공간창조를 유도해나가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특히, 일정한 예산에 의해 대량으로 공급되는 공립 초중등학교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교육시설을 논할 때 양으로 환산하여 사고하는 교육정책 입안자의 행위는 건축가집단의 역할을 일정한 정도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칫하면, 우리는 제2의 표준화설계도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